

교과서 1종만 ‘한국 원폭피해자 기술’

합천평화의집 중·고교 교과서 분석… “정부 무관심 방증”

국내 중고교 역사 교과서 24종 중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서술을 한 경우는 1종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원폭2세환우 쉼터 합천평화의집(원장 윤여준)은 고교한국사 8종·고교세계사 4종·고교동아시아사 3종·중학역사 9종 등 국내 중고교 역사교과서 29종을 살펴본 결과, 한국인 원폭피해 관련 기술을 한 곳은 부산동아 단 한 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7월 31일 밝혔다. 2013년 검정(두산동아 고교한국사)은 “한국인 사망자가 4만여 명에 달한다”고 기술했으나 그마저도 1줄 서술에 그쳤다.

합천평화의집은 “일본군위안부, 사할린 동포, 원폭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방치는 위험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 노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판사들의 무관심 역시 이를 방증하는 것 아니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관한 사회적 무관심이 그대로 교과서 기술에서도 드러났다는 것이다. 실제로 역사 교과서의 경우 관련 내용 누락은 물론 갈수록 분량마저 축소되고 있다.

2011년 두산동아 중학교 역사교과서의 경우 “한국인 원폭피해자는 얼마나 될까?”라는 제목에서 “원자폭탄이 떨어진 후, 거의 모든 건물이 파괴되고 무수한 사람이 목숨을 잃었다. 무게 3톤의 원자 폭탄, 한 기가 떨어진 엄청난 양의 빛과 열기가 한순간에 16만 명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다행히 살아남은 사람 중 35만 명도 방사능 피해를 입었다. 그중 3만여 명이 살아남아 귀국하였지만, 그 자녀들까지 복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라며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합천평화의집 이남재 사무총장은 “피폭자들에 대한 지원·보상의 법적 근거와 복지 지원이 미비한 현실”이라며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겪고 있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합천평화의집은 8월 5~6일 국내 원폭피해자들이 가장 많이 사는 경남 합천 일원에서 핵·방사능 피폭자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제3회 2014합천비핵·평화대회’를 개최했다.

배현진 기자

3천배·서명운동…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

조계종 노동위·불교 NGO, 특별법 제정 촉구운동 전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목소리가 연일 높아지는 가운데 불교계 역시 이에 대한 지지의사를 적극 행동으로 옮기고 있다.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와 결사모임 붓다로살자는 7월 17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보름 동안 서명 받은 인원은 8천5백명에 달한다. 이 와 함께 두 단체는 광화문 광장에서 매일 1백백씩 절명상을 진행하고 있다. 매일 평균 10여명이 참가해 세월호 참사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낭독하며 100배의 절을 올린다.

한편 8월 2일에는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와 불력회(부처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 회장 박종진)는 광화문 광장에서 3천배를 봉행했다. 30여명

의 참가자들은 이튿날 새벽 5시까지 절을 올리며 여야 당쟁에 갇혀 있는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조계종 중무원조합(위원장 심수원) 또한 8월 1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 단식장을 찾았다. 사회국장 덕문 스님을 비롯 조합원 10여명은 단식 중인 도철 스님과 유가족에 합장 반배를 올리며 위로를 전했다.

8월 1일 기준으로 현재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중인 이는 김영오씨와 노동위원회 도철 스님, 국회에서 단식을 이어가는 유경근 가족대책위 대변인 단 세명이다. 13명의 유가족이 단식으로 탈진해 쓰러졌지만 세월호 특별법은 아직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배현진 기자



조계종 중무원조합원들이 8월 1일 서울 광화문 광장 단식장을 찾아 세월호 참회와 서원의 기도를 낭독하고 있다.

“이사진 해종행위 중단” 對 “내부 회의 방해”

끝이 안 보이는 조계종·선학원 갈등… 분원장 회의 놓고 ‘攻防’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7월 23일부터 30일까지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된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서 연일 표면화됐다. 수덕사 대웅은 선학원 분원장 회의처에서 피켓시위를 벌였고 수덕사 측 중앙종회의원 정범 스님과는 물리적 마찰을 빚어 폭행 논란에 벌어지기도 했다.

7월 30일 진행된 서울·경기 지역 분원장 회의에서도 조계종·수덕사와 선학원의 신경전은 이어졌다. 회의 시간인 1시에 앞서 서울 안국동 선학원 중앙선원에는 수덕사 측 스님들이 상경해 피켓 시위에 들어갔고, 선학원은 중앙선원 입구를 철저히 봉쇄했다.

이날 수덕사 측 시위에 동참한 수좌 낙운 스님은 “선학원의 설립 목적 중에는 선원 수좌에 대한 지원이 있지만 현재 선학원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여기 계신 스님들은 제방 선원에 들어가서도 선학원의 현실이 어떤지 낱알이 알렸으면 한다”고 밝혔다.

시위에 앞서 덕승총림 수덕사 선학원대책위원회(위원장 효성)는 7월 30일 성명을 발표하고 선학원 임원진의 악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수덕사 선학원대책위는 “선학원 임원진을 장악하고 있는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진은 만공 스님과 수덕사의 송고한 뜻을 헌신처럼 버리고 오로지 재단 사유화를 위한 탐욕스런 행보와 전횡을 보이고 있다”고 힐난하며 △조계종 총지종통 봉대와 이사진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 △정혜사 분담금 10배 인상 및 사교사할 지정 재산관리인 임명 △건성암

토지수용대금 6,400만 원 착복 △분원장 혼란 피해 가중 △분원장 회의 결과 허위사실 유보 △정범 스님 폭행 정당화 등을 악행으로 지적했다.

조계종 총무원 역시 ‘선학원 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제작·배포하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총무원은 자료집에서 “선학원은 조계종단의 사찰과 스님들이 선종진작의 목적으로 설립했음에도 현재는 사찰을 등록받아 관리하는 별개의 종단 역할을 하고 있다”

수덕사 측 회의장 앞서 연일 시위
“선학원 더 이상 종단 기능 하지마라”
중단, 선학원 자료집 제작·배포

300여 분원 중 147곳 “이사진 지지”
서울·경기 회의 취소, 서면 대체
“견제 아닌 함께하는 포용력 보여라”

면서 “선학원은 본래의 설립 취지로 돌아가 선종진작 사업과 수좌 후원사업에 전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학원의 설립 주체는 조계종단이 며 조계종 스님들은 하나의 종단 체제 아래 육화(六和)의 정신으로 화합해 수행과 전법활동을 해야 한다”면서 “선학원은 더 이상 사찰 등록 및 관리 등 중단 기능을 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반면 선학원 측은 내부 의견을 모으기 위



조계종·수덕사와 선학원의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7월 30일 열린 서울 경기지역 선학원 분원장 회의에 수덕사 측 스님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한 분원장 회의를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시위를 통해 방해한 것은 유감임을 분명히 했다. 선학원 이사진은 7월 30일 오후 3시 기자회견을 열고 종단의 회의 방해를 비판했다. 이사장 법진 스님과 이사회 임원들은 “서울·경기 지역의 분원장 스님들이 참여하는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어 참석하기로 한 스님들에게 전화로 의견을 물었다”면서 “많은 고민 끝에 지역별 분원장 회의를 마치고 했다”고 밝혔다.

선학원 이사진에 따르면 전화를 통해 이사회 결의를 지지한다고 의견을 표명해 서울 경기지역 분원장 스님은 총 63명으로 앞선 회의의 지지자를 포함하면 총 147명의 분원장 스님들이 이사회의 의견을 동조한 것이다.

종단과 수덕사의 회의 방해에 대해서 이사진은 “분원장 회의는 법인관리법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해 분원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면서 “조계종과 수덕사가 이를 막아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도리어 지역 불교의 위상과 발전을 해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수덕사 측이 제시한 재단 임원진들의 전횡에 대해서는 “법정 스님의 수덕사 주지 당시 청원서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선학원 임원진은 ‘수덕사 임원이 추천하고 선학원이 임명한 정혜사·간월암 주지가 법인에 허락없이 간월암을 조계종에 이중등록해 이를 원상회복을 요구한 것’이라며 ‘수덕사가 이와 관련한 소송자료를 공개하면 사실은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덕사가 요구하는 토지 보상금 6,400만원은 예산금이 수용한 토지 수용금으로 재단에 예치돼 있다’면서 ‘이 돈은 갈등을 야기하고 있는 수덕사가 요구할 수 있는 성격도 아니며 더욱이 써서 없애야 할 재화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현재 종단과의 갈등 상황에 대해서는 ‘불교 발전에 도움이 안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내외적으로 불교가 어려운 상황인 만큼 종단의 포용력을 보여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법진 스님은 “백양사 도박 사건과 종단 지도층 스님들의 도박 의혹, 표창사 횡령 등 불교는 많은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종단과 선학원의 파열음은 불교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견제와 장악이라는 마인드가 아닌 서로 어깨를 나란히 하며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사찰·종단 등 신도 주민번호 수집 전면금지

7일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기존 주민번호도 2년 내 파기

오는 8월 7일부터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불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전면 금지된다. 또한 기존에 수집된 주민등록번호 역시 2016년 8월6일까지 모두 파기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도와 사찰·불교단체 홈페이지 회원 관리를 위해 주민 번호를 수집해 온 전국 사찰과 불교단체들의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의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

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에는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수집된 주민등록번호가 분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인정보의 분실과 유출을 막기 위한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도 필요하다.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을 경우에도 이용 목적과 제공받는 개인정보의 항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알려야 한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조계종은 홈페이지 회원 가입 당시 받은 주민번호를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는 등 대비하고 있다. 스님들의 경우는 승적번호로 대체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 가입 시 주민번호를 가입하는 종단 관련 사이트의 경우에도 시행에 맞춰 주민번호를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조계종 관계자는 “신도등록의 경우 생년월일만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스님들이 이용하는 연수 사이트의 경우에도 승적번호로 대체해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8월 1일자 전국 사찰에 공문을 발송해 해당 사항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16교구본사 고운사 주지 호성 스님 사실상 당선

문중 내 합의로 단독 입후보

조계종 제16교구본사 고운사 차기 주지에 현 주지 호성 스님(사진)이 사실상 당선됐다. 제16교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고운사 주지 후보 등록 결과 현 주지 호성 스님이 단독 입후보 했다”고 밝혔다.

고운사는 그동안 문중간 합의를 통해 주지를 선출해왔고, 이번에도 호성 스님을 차기 주지에 연임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8월 4일 고운사 산중총회는 투표없이 당선을 확정 짓게 됐다.



신성민 기자

공

불기 2558(2014)년 | 제 26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후보자 추천

고

종단에서는 포교활동을 통하여 불교와 종단발전에 지대한 공이 있는 사찰, 개인 및 단체를 대상으로 그 공로를 치하하고 전법활동에 더욱 매진 할 수 있도록 “제26회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수상자 선정절차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추천 바랍니다.

다 음

- 1** 시상종별
 - 가. 포교대상 : 종 정 상 0명
 - 나. 공 로 상 : 총무원장상 0명
 - 다. 원 력 상 : 포교위원장상 0명
- 2** 추천분야
 - 가. 계층포교분야 : 유아,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 나. 직능포교분야 : 군, 경찰, 직장직능 등
 - 다. 문화체육포교분야 : 미술, 건축, 음악, 문학, 학술, 연예, 스포츠 등
 - 라. 사회포교분야 : 환경, 통일, 국제, 인권, 장애인, 복지, 여성, 노동 등
 - 마. 매체포교분야 : 방송·언론, 출판·인쇄, 인터넷 등
 - 바. 지역포교분야 : 신도 교육 및 조직운영, 지역사회 기여도 등
- 3** 추천대상
 - 가. 종단스님 및 재가불자로 5년 이상 당해 공적분야에서 활동한 자
 - 나. 종단소속 사찰 및 단체는 종단등록 및 설립경과 5년 이상
 - 다. 재가불자는 종단신도등록 필한 자
 - 라. 포교대상[대상] 후보자는 해당분야에서 20년 이상 활동한 자
 - 마. 추천시 유의사항
 - 포교대상(공로상, 원력상 포함)을 수상한 자는 5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사항으로 추천될 수 없음.
 - 종단에서 수여하는 일반표창을 수상한 자는 1년 이내에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될 수 없음.

- 4** 추천권자
 - 가. 교구본사 주지
 - 나. 종단 소속 포교단체 대표자
 - 다. 종단 등록 신도단체 대표자
- 5** 제출서류
 - 가. 추천권자의 추천서 <소정양식>
 - 나. 후보자 포교활동 공적서 <소정양식>
 - 다. 후보자 이력서(사진부착) <소정양식>
 - 라. 종단부여 자격증 또는 품수증 사본, 종단간기 재직증명서, 공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자), 신도는 신도증사본 및 교무금납부영수증 사본
 - ※ <소정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6**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14년 8월 4일(월) ~ 9월 30일(화)
 - 나. 후보자 추천서류는 직접 접수 및 우편 접수로 함 (인터넷, 이메일, 팩스 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다. 우편접수 시 9월 30일까지 우체국 소인 유효함.
 - 라. 서류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 접수 취소 됨.

- 7** 문의 및 접수처
 - 가. 전화 : 02)2011-1891 / 전송 : 02)720-7065
 - 나. 담당자 : 포교팀 주임 최윤영
 - 다. 주소 : 110-170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45번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대한불교조계종 포교팀 포교팀
 - 라. 조계종 홈페이지 : www.buddhism.or.kr
- 8** 시상일자 : 불기 2558(2014)년 11월 중 (일자 추후 공지)
 - ※ 수상자 발표는 시상일 2주 전 불교신문 및 조계종 홈페이지 공고를 통하여 발표하며, 수상자 발표 및 시상일자는 종단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9** 시상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

불기 2558(2014)년 7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